

# 공정거래법 벌칙 규정과 형사법의 체계적 정합성

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강우찬

2022. 5. 27.

\* 본 발표내용은 필자가 소속된 법원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한 필자의 견해에 불과함을 밝혀둡니다.

# 1. 벌칙규정의 체계와 해석론



# 공정거래법 벌칙규정의 체계

## 제124조(벌칙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5조를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
  2. 제13조 또는 제36조를 위반하여 탈법행위를 한 자
  3. 제15조, 제23조, 제25조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
  4.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
  5.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자
  6.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
  7. 제21조 또는 제22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자
  8. 제24조를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자
  9.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하도록 한 자
  10. 제45조 제1항 제9호, 제47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
  11. 제48조를 위반한 자
  12. 제5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한 자
  13.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·폭행,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·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- 제128조(양벌규정)
- 법인(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
-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
-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
-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 양벌규정의 해석 문제

- 공정거래법상 범죄는 ‘자연인 누구든지’ 범할 수 있는 범행인가?
- ‘사업자에 소속된 자연인 누구든지’ 범죄 주체가 되는가?
- 또는 ‘사업자’만이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가?
- 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앞에서 본 본조와 양벌규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(특히, 법인의 경우)

[1설] 건축법 전합판결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 :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제124조의 적용은 없고, 제128조 양벌규정 중 “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” 부분이 처벌근거가 된다고 봄

➔ 이에 따르면 법인 소속 자연인은 언제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귀결(↔ 같은 전제이면서 징역형 가능 견해도 있음)

[2설] 제124조는 사업자만이 주체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견해 : 법인 소속 자연인에게 적용(~한 자 not 사업자) + 법인은 제128조로 처벌

➔ 대법원은 “일부 범죄”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2설의 입장이나 명시적 판시를 낸 적은 없음



## 2.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과 형사법리의 정합적 개선 방안



# 공정거래법 사건의 특수성과 딜레마

- 우리법은 기본적으로 공정위의 행정처분을 통한 공적집행을 주된 수단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체계 : 형사적 집행은 '부수적 집행 수단'에 불과함
- 그렇기 때문에 제재적 행정처분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'사업자'의 행위를 전제로 함. 행정사건에서 고의·과실은 책임주의와의 관련성에서 사업자 의무해태가 정당화될 상황이 있는지 여부라는 측면에서만 부수적으로 고려됨
- (그런데) 앞에서 보았듯이, 우리 공정거래법은 제재적 처분의 발동 요건을 정한 조문을 만연히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 ➔ **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함**
-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'법인인 사업자의 행위'는 무슨 기준으로 포착하여 그 책임을 사업자인 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을까?

# 공정거래법 사건의 특수성과 딜레마

-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'법인인 사업자의 행위'는 무슨 기준으로 포착하여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을까?
- 법인인 사업자는 팔다리가 없으니, 결국 그 소속 자연인이 어떠한 금지된 행위를 해야 함(= 금지의무 위반, 작위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) cf.) 앞에서 본 1설이 적용되는 경우는 대체로 작위의무 위반 내지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임(건축법, 개인정보보호법 등)
- 그런데 법인 소속 자연인 여러 명이 해당 금지행위에 개입되어 있을 때 행정처분 단계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음 : 전체적으로 법인의 행위로 평가만 할 수 있으면, 그 책임 귀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임

(그런데) 만일 사업자 소속 자연인 중 누군가가 정범이 될 수 있다면, 그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추가적 논의가 더 필요해 짐 : 일련의 행위 중 어떤 행위, 어떤 결정을 한 사람이 정범으로 처벌되는지의 확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됨

➔ 이는 입건 대상이 누구인지와도 연결되므로 수사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+법인과 그 소속 개인 및 각 개인별로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, 사전에 컴플라이언스를 하는 문제, 자진신고 여부 결정 및 증거 제공 범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됨

## 해결책 1 : 공정거래법 형사처벌 구성요건 규정을 독자적으로 새롭게 쓰고, 법원의 해석론도 조기에 확립되어야 ➔ 예측 가능성 높여야

- 카르텔은 합의를 처벌함 : 실정법상 합의 자체를 처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➔ 음모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내란음모 정도(?). 이 경우도 내란죄가 별도로 존재함
- 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개입되게 됨 ➔ 사업자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 / 공범, 종범 인정에 극히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(기본적 구성요건 자체가 너무나 흐릿함. 의사연락만으로 처벌되므로 수사/형벌권 남용될 가능성 큼)
- 기존에 행정적 규제만으로 집행해오던 영국 등에서 카르텔에 대하여 추가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할 때에 행정제재 근거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구성요건을 새롭게 써내려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 때문임(또 하나는 'per se' 유형 묘사 문제)
- 이러한 기본적 예측 가능성조차 부여되지 않으면 입건 여부도 예측할 수도 없고,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될지 피의자가 될지도 알 수 없어 기본권 보장에 문제가 생길 우려, 수사절차에 수사기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커짐 : 컴플라이언스에 상당한 장애



# 해결책 1 : 형사처벌 구성요건 규정 개정+해석론 확립

-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함 : 이러한 유형은, 특히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
- 예컨대, 시지사업자가 리베이트 제공을 조건으로 한 묶음판매 및 배타적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(시지와 불공정거래행위 모두 적용했다고 가정), 그 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 대해 행정제재의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음
- 그런데 위의 경우 고의 인정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, 어떤 행위를 한 자연인이 처벌을 받는 것 인지도 극히 알기가 어려움
- Cf.1) 재산범죄인 배임, 횡령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이고 이익의 귀속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님 / 그래서 효과가 별로 문제되지 않는 갑질 유형의 거래상 지위남용이 간혹 처벌되고 있는 것임 / cf.2) 사익편취 등 부당지원
- 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각종 단독행위들은 일단 특정 피해자라는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움. 소비자후생이 훼손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기 때문임. **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관여하면 내가 입건되고, 처벌되는지를 알 수가 없음** → 기본 컨셉 자체가 형벌에 친하지 않고, 수사권 남용의 여지가 커질 수 있음 : **마찬가지로 컴플라이언스에 상당한 장애가 됨**

## [참고] 유럽 각국의 “카르텔” 집행체제 현황

-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, 효과에 의한 수평적 거래제한(by effect case), 수직적 거래제한에 대한 형벌 규정을 두거나 처벌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 
→ 그 자체로 난센스임 / 미국도 독점화(서먼법 제2조)를 형사처벌하지 않음
- 이러한 유형들에 대한 형벌규정은 삭제되어야 함
-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고, 실제로 사문화되어 있는 구성요건에 대한 형벌 규정을 존치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인지?

---

**형사 + 행정 두 기관 집행 : Very Rare – 영국, 아일랜드**

**독일은 입찰담합만 별도 구성요건으로 처벌 (= 덴마크) :**

**기소법정주의 국가임에도 처벌조항 두지 않은 연유를 잘 생각해야.**

**권력기관의 자의적, 재량적 처분에 대한 극도의 경계(단순 응징의 필요성만으론 부족)**

---

**비범죄화 : 네덜란드, 스웨덴, 스페인, 룩셈부르크 등**

2022-05-30

---

**프랑스 : 상법, 개인 형사처벌(구성요건 상이) + 경쟁당국이 기소 결정**

# 해결책 2 : 효과 중심 판단 유형들

## - 과감한 추가적 형벌 규정 삭제 내지 구성요건 재설정

※ 기본적으로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행위 유형들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적합한 범죄유형이 아님(이는 조문외형으로 구별되기 어려움). 뿐만 아니라,

➔ 공정거래사건에서는 이러한 “효과”(= 경쟁제한성, 공정거래저해성)가 객관적 구성요건이므로, 이에 대한 ‘고의’를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사실상 처벌도 불가능(= 미국 DOJ의 입장, 유럽 일부 회원국이 겨우 카르텔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하면서 구성요건 설정에 그렇게 세심한 공을 들인 이유 중 하나임)

■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두51365 판결

➔ 공정거래 사건 처벌규정 적용 무한확장에 대한 대법원의 우려

(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 지위 남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20. 2. 27. 선고 2016도9287 판결도 같은 맥락 : 처벌 불가)

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중 제반 사정의 형량과 분석을 거쳐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판단까지도 요구되는 경우나 사용된 수단의 성격과 실질이 가격 할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경쟁질서 내지 거래질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복잡한 규범적·경제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범죄의 구성요건인 ‘공정거래저해성’에 관한 ‘고의’를 인정하는데 신중해야

■ 상조회사 사건이었으나 복잡한 경제적 효과까지 따져봐야 하는 사건이었음

위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일부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여 우려가 현실이 됨

# 그럼에도 굳이 시지/일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형벌규정을 존치한다면? 심지어 기소까지 한다면? → 해결책(?) 2

- 대법원이 시지나 불공정행위 일부 유형에 대하여 앞서 본 1설의 '칼을 뽑을 수도' 있음
- 이 경우 자연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만 선고받게 될 것임
- Cf.) 재산범죄인 배임, 횡령의 경우 피해자가 회사이고 이익의 귀속 주체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님
- 대부분은 '고의'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그럭저럭 사법통제는 가능하기는 함
- 그러나 위 범죄 유형 수사를 빌미로 하여 별건수사를 위한 정보 탐지의 창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 못함(영장없이 공정위로 하여금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압박하는 형태)
- 이 점에서도 폐지할 필요성이 인정됨
- 그리고 공정위는 카르텔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'행정조사'에서, 당사자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는 단계에서부터 서식을 마련해 제출된 자료의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의사 확인 필요 → 예컨대,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데까지 동의하는지, 어느 범위에서 동의하는지 등 → 부동의한 자료는 타 기관 등에 임의로 넘겨 주어서는 안되고, 수사기관은 필요시 영장을 받아와야 : 임의제출에서의 '동의'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관철

### 3. 컴플라이언스와 관련한 몇가지 실무상 문제점





# 정보교환행위 : 일상적 비즈니스 영역의 형사적 위험성 커짐

법 제40조(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) ① 사업자는 ……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(이하 “부당한 공동행위”라 한다) …… 해서는 아니 된다.

9. 그 밖의 행위로서 …… 가격, 생산량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

- 위 조항은 정보를 주고 받는 "행위"를 제재하는가? 아니면 정보교환 "합의"를 제재하는가?  
당연히 합의를 제재
- 통상의 경우 이걸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  
→ 장기간 가격정보 등을 주고 받은 경우 묵시적 “합의”를 추인 가능할 따름
- 그렇다면 형사처벌의 경우는? A사(갑, 을, 병, 정, 무가 정보 송신, X, Y, Z가 수신), B사(갑, 을, 병, 정, L, M, N, O, P가 송수신): 누가 처벌되나? 직접 주고받은 영업직 사원? 만일 한번만 주고 받았다면 처벌 가능?  
→ 일반적 압수수색의 위험성 증대(영장심사하는 법원의 역할 중요)
- 임원에게 정보교환 사실을 사후보고하면 임원간 합의 성립? 이때 정범은 누구?  
➔ 정보교환 합의의 특수성 : 다른 유형과 달리 경영상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“사실행위적 성격”이 매우 강함 → 공정위 제재에는 문제가 없으나 형사처벌의 경우 누가 처벌되는지가 매우 불분명 : 결국, 결론은 “주고받지 말라!”

# 연성공동행위 내지 per se로 보기 어려운 유형과 관련한 문제점

- 검찰에서 사건을 잘 가려내는 선구안이 중요/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
- **부당공동행위에 관한 법 제40조에 포섭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 당연위법은 아님**
- **per se - Rule of reason의 구분(경성- 연성의 구분)**은 결국 법관의 경험칙으로 categorization 과정을 거쳐서 분류되는 것임 →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함
-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실책 사례 → 원격의료, 영리병원과 관련한 1일 집단휴업을 결의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아 형사기소한 사례 :

**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6두36345 판결 / 관련 형사사건은 1심부터 무죄**

(경쟁제한성, 부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박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음)

→ 이러한 유형은 언뜻 경성공동행위로 보이기도 하지만, 사안을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히 당연위법 사안으로 볼 수는 없음. 이 부분이 바로 법관의 직관과 경험, 전문성이 들어가는 부분임 / 검찰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형사법원의 전문성 문제도 있음 / 구약식 / 벌금형 사안으로 관심 밖인 경우 다수 / **부당성 판단의 헌법적 감수성**

→ 위 사안은 요행히 1심 단독판사가 공정거래법 전문가였음

- 또한 **거래상 지위 남용이라고 하여 항상 그 위법성 여하 판단이 명백한 것은 아님**

→ **위법성이 분명한 갑질 유형을 잘 골라내야** : 기소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는 주로 검찰의 몫이고, 현재까지는 그래도 높이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싶음 (cf. 앞서 본 상조회사 사건은 별론)

# 준법경영과 행정조사, 그리고 형사절차, 그 불안한 파찰음

법 제125조 (벌칙) 2년 이하 징역 / 1.5억원 벌금

6. 제81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
7. 제81조 제2항에 따른 조사 시 자료의 은닉·폐기, 접근 거부 또는 위조·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

\* 자료나 물건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벌 간접강제+사무소 / 사업장 출입 / 조사 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들과 이를 거부할 경우의 처벌규정 → **위헌심사 필요성**  
[기소되기 전까지는 재판의 전제성 만들기가 쉽지 않음 : 실질은 권력적 사실행위  
이므로 조사단계에서 행정소송 (쟁송법상 처분으로 보아) 이나 헌법소원을 이용하는 방법 고려 가능

# 법칙조사 제도의 문제점 & 법의 지배에 부합하는 “근본적 해결책”

-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사전/사후 심사제 같은 형태의 비형사적 사법심사제도의 도입 필요(입법적 해결 - 처분성 등 논란 극복)
- ➔ 법칙조사 제도는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게 됨. 행정조사의 권력성 문제는 공정거래사건 뿐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조사(특히 금감원, 금융위,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조사에서는 더욱) 모두에서 문제되는 것임
- ➔ 이러한 행정절차 일반에 수사기관의 조기 개입 내지 ‘편리한 별건수사 방편’을 마련해 주는 셈이 되므로 허용되어서 안됨 (잘게 포장하면 수사의 단서 취득)
- ➔ 또한, 정책적 형성 여지가 있는 행정절차를 수사기관이 Spoil할 수 있음
- ➔ 오히려 미국/영국처럼 엄격하게 행정조사절차와 형사조사절차를 **준별**하고, **상호 취득 증거 사용에 관한 엄격한 통제장치**를 둬으로써 해결해야 함
- ➔ 나아가 위수증 법칙은 수사기관이 함께 개입한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도 이미 적용되고 있음 : 헌법원리이기 때문임
- ➔ **행정조사의 권력성이 문제된다고, 그 과정에 “더 권력적인 수사기관이” 조기에 함께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의 본말을 전도한 것임**(결국, 법칙조사제도는 우리 행정법 체계에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행정 관련 전문성이 떨어지는 수사기관에게 광범한 별건 수사의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어 더 침익적임)
- ➔ **[근본적 해결책]** 조사를 받는 당사자에게 **법원에의 이의신청권을 부여하여 행정 조사 자체의 위법성 여하에 대한 사법심사를 받을 길을 명쾌하게 열어주는 한편,** 일정한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조사 **전**에 법원의 사전 사법심사를 받도록 하여 적법절차 원리가 관철되도록 하여야 함 : 이것이 **정도(正道)**임

## 준법경영 활성화와 형사재판 그리고 법관의 양형

---

- 법원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다거나 이와 관련한 실무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- 얼마전 기업 총수 사건 때 비로소 화제가 되었으나, 일회적 이벤트에 머물지 향후 법인 처벌과 관련한 경향성을 가지게 될지에 관해서는, 아직 뭐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임
- 그러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려면, 결국 “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함
  - ➔ 이때 CP의 완비 여부와 실제 작동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고, 이러한 점을 법인 책임 뿐 아니라 양형에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보임
- 양형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의 정책적 논의사항으로 보임





유럽: 법인에 대해 행정제재(fine/civil penalty)와  
형사처벌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음



유럽에서는 행정청이 법원의 강제조사, 제출 허가장을  
동원 가능한 나라도 있음  
(형사절차가 아니므로 압수수색영장과는 다름)



한국 : 자료 제출 거부 = 이행강제금 / 과태료 / 조사  
거부 방해로 형벌  
cf.) 국세청 : 특정한 경우 영장없이(!) 주거 수색 가능

2022-05-30

[부록]

추가로 생각해  
볼 점

## 생각해 볼 점 1 : 형사소송 증명 수준과 헌법

- 형사소송에서 증명 수준을 높이는 것이 단순한 입법정책의 문제인가?
- 즉, 형사소송법 규정이 없다면 민사소송 수준으로 낮추어도 괜찮은가?
- 만일 괜찮지 않다면, 왜 그러한가? 헌법상 근거를 중심으로 답해보라.
- 만일 형사소송상 증명 수준 상향의 근거가 (적어도 일부라도) 헌법에 있다고 볼 경우에
  - 헌법상 적법절차원리, 제27조 제4항 "형사피고인은", "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 " 의 의미 범위
  - 검찰이 제공한 증거 또는 사실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취득한 증거를 이용하여 공정위가 제재한 경우, 공정위 증거를 이용하여 검사가 기소한 경우(동시 제재)에 유독 행정소송에서만 증명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 타당할까?
  - 아니면, 증거 취득/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족할까? 사용을 제한할 방법은?

## 생각해 볼 점 2 : 진술/자료 제출 의무 부과?

- 이행강제금, 과태료 등으로 자료 제출을 압박하여 증거를 취득하는 경우, 이것을 비권력적 행위라 볼 수 있을까? 그 자료 제출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?
- 이러한 압박을 거쳐 취득한 증거를 공정위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넘겨주는 경우, 이것을 이른바 "적법한 임의제출"에 의한 증거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?
- 이러한 증거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취득한다고 하여, 최초 취득과정의 절차적 오염이 제거된다고 볼 수 있는가?
- 법률로 피심인/사업자에게 제출의무를 부과하거나, 행정청에 하명권한을 주거나, 불응하는 사업자에게 행정·형사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면, 헌법에 부합할까? 단지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있으면 위헌은 아니게 되는가?
- 국세징수법처럼 영장없이 주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헌법상 영장주의, 적법절차원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? (조세포탈은 형사처벌됨을 상기할 것)

- the End -

수고 많으셨습니다!!

